

# 환경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 규 수\*\*

## I. 머리말

오늘날 심각한 환경파괴는 우리 삶에 직결되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발전 사고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과 인접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역시 방사능 유출에 대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종래의 공해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없기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환경문제는 다시 말해 미래는 환경국가라 일컬어지기도 한다.<sup>2)</sup> 이러한 환경국가는 결국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측면에서의 권리 즉, 환경권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면 환경권 인정의 법적인 측면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권의 법리가 바로 환경법의 지도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환경권은 환경법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sup>3)</sup>

오늘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환경권의 보장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서 그만큼 다른 기본권과 권리의 제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

---

\* 투고일자 : 2012. 5. 31   심사일자 : 2012. 6. 12   게재확정일자 : 2012. 6. 19

\*\*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연구원

1)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4판, 박영사, 2010, 36면.

2) 미래의 국가는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아울러 환경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환경국가의 특색은 무엇인가. 법치국가는 과거 관련 적이고 정태적 성격을 지니며, 사회국가는 빈부간의 갈등해소라든지,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같은 동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반면, 환경국가는 전래의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와는 달리 '예방국가' 또는 '사전배려 국가'임을 그 특색으로 한다. 왜냐하면 환경국가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명백한 환경위험에 대처하기보다 오히려 장래에 생겨날 환경위기를 미리 예견하며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56면).

3)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74면.

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권의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의 전체체계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은 입법형성에 의한 권리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입법형성에 의한 권리의 구체화는 미시적 측면에서 환경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sup>4)</sup> 또한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가와 관련해 이에 대한 문제는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무엇이고 헌법이 환경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어떠한 헌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단순한 프로그램규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범이기 위해서는 환경개념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권에 관한 범위 설정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 나아가 환경권 설정에 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환경의 개념

### 1. 학설상 환경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하천, 산, 물 등과 같은 자연환경, 유적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적 환경, 도로, 공원,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헌법 제35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환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만을 보호대상으로 이해하는 견해<sup>6)</sup>와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sup>7)</sup>가 있다. 생각건대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인간의 생존이나 건강이 침해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환경권이 논의되고 생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의

4) 정극원, 헌법저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403면.

5) 김종보·김배원,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1호, 2012, 30면.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687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678쪽; 허영, 한국 헌법론, 박영사, 2006, 439면; 홍성방, 한국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4권, 1990, 166면.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839면.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5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국가의 주택정책은 국가의 일반적인 공익실현 작용의 하나이며 부분적으로는 사회정책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등 사회적 환경을 헌법 제35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환경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할 것이다.<sup>8)</sup>

또한, 생활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보았을 때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surrounding)의 일체로서의 인간생활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인간환경이란 자연을 통하여 진화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와 문화를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요소의 모체(matrix)라고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환경의 개념을 분류해 보면 양분설<sup>9)</sup>과 3분설<sup>10)</sup>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 2. 사전적 의미로서 환경

사전적 의미로서 환경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의 개념이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환경을 의미할

8)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250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366면.

9) 양분설의 입장으로 이것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첫째 가시성의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둘째 그 창출의 人工性 여하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10) 3분설로 이것은 양분설을 종합하여 다시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3분하는 것으로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은 가시적인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물리적 인공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인간에 의하여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 양분설을 재편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3분설에 대한 환경법의 대상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을 제기한 경우 살펴보면, 먼저 자연환경은 탄생이나 인간의 생존이 되는 자연을 환경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물리적 인공환경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시설, 즉, 도로, 공원, 교량등과 더 나아가 공공의 성질을 갖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전기, 가스, 하수도 등의 물리적인 인공환경, 그리고 인류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인 유산도 환경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서 환경법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환경에 대하여는 환경법의 대상에서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가시적인 인공환경, 예를 들어 정치, 종교, 경제제도 기술, 행정제도, 더 나아가 정신환경 등을 모두 환경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환경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 환경법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은 환경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1, 54면.

11) Walter Island, Economical-Economic Analysis for Regional Development(NEW YORK : Free Press, 1972), pp.51-52, 정사인, 환경오염의 법적규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고황논집 제17호, 1996, 120면 재인용).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설은 자연환경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sup>12)</sup> 그리고 환경이란 우선 자연환경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환경권의 내용은 “자연환경을 자연환경 그대로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환경(도로, 교량, 등산로 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도 있다.<sup>13)</sup> 또한 자연환경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sup>14)</sup> 또한 연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3. 환경권의 범위

환경권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즉 규범으로서의 환경권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함은 어려운 경우이다. 즉 환경권의 내용을 지나치게 넓게 보면 환경권이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이해가 된다.<sup>15)</sup>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환경권을 우선시하면 타 기본권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타 기본권을 우선시 하면 환경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 이해될 것이지만 이는 헌법 제10조<sup>16)</sup>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으므로 환경권 조항의 의미가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서 환경권에서의 환경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sup>17)</sup> 사회적 문화적 환경까지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보호되어야 할 환경권이 무분별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호의 목적에서 환경보호의 목적을 높게 측정한다면 이는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

1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585면.

1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439면.

14) 생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기초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활하게 되고, 생활하면서 자연에 인공적인 것을 추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공이 가미된 자연은 또다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용어상으로는 생활환경을 이렇게 자연에 인공이 가미된 환경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적인 것은 단지 물, 대기, 토지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은 사회적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물리적인 환경에 한정해서 생활환경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보·김배원, 앞의 논문, 32면. 또한 헌법적 권리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생활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선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연환경인가와 또 인공적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도 환경을 환경권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점에서 동일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118면.

15)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연구 제27권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5, 379-380면.

16)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7) 김종보·김배원, 앞의 논문, 32면.

있어서 다른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제한 할 수 있기에 환경권의 범위 설정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 III. 환경권의 법적성격

#### 1. 헌법 제35조의 의미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부여하였다. 국가와 국민에게는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35조 1항). 국가에게는 특히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동법 제3항). 이러한 환경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유보 되어 있다(동법 제2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 내지 규제하여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될 수 있을 때 즉 환경보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에 따라 개인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보전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헌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환경보호는 헌법적합적인 질서 내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소극적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 진다.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행정이나 입법도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환경보존의 범위 내에서 법치국가적인 요소들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sup>19)</sup>

18) 현행 헌법처럼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입법례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환경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내지 국가목표로서의 환경보호만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정종섭, 헌법학이론, 박영사, 2006, 678면; 홍완식, 헌법상국가의 환경보존 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6권(건국대학교), 2001, 3면 이하 참조. 한편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보호를 기본권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 형식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고무현, 환경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4, 14면 이하 참조.

19)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617면.

## 2. 환경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논의가 된다.

### 1) 학설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다. 1) 환경권은 부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부분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쾌적한 주거 생활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2)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총합적 기본권이며 그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하면서 자유권적 성격에서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 생존권적 성격에서 환경 보호·보장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4) 환경권은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 형태로서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당연한 생활 질서로서의 성질도 가지며 법률제도의 보장이라는 제도적 보장의 성질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 5) 환경권은 국가에 대하여 환경의 유지·보존·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이며 깨끗한 환경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방어권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sup>20)21)</sup> 그리고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본다면 그 실현의 태양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 (1)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적규정설)

환경권은 입법의 방침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

20)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65면.

21) 생존권적 기본권(김철수, 앞의 책, 889면), 사회적 기본권(권영성, 앞의 책, 693면), 정신·문화·건강 생활영역의 보호(허영, 앞의 책, 439면)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환경권을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676면.

며 법적의무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환경권은 국가의 이념과 선언을 한 규정으로 보고, 국가의 의무달성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재판에 의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sup>22)</sup> 즉 환경권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보호조치를 구하는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에 향하여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포괄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라 본다.<sup>23)</sup>

## (2) 추상적 권리설

환경권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구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구체화는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법에 의해서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sup>24)</sup> 추상적 권리의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 또는 입법형성에 의하여 추상성이 제거되지만 하면 구체적인 실현을 이루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격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강령의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sup>25)</sup> 따라서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권이 실현되려면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sup>26)</sup>

## (3) 구체적 권리설

헌법 제35조에 환경권 그리고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환경권은 법적 권리로서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동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 등을 통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고, 환경침해행위의 중지청구나 방해배제, 예방청구를 기초 지우는 구체적 권리라는 견해이다.<sup>27)</sup> 따라서 환경권은 국민이 입법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에 적합한 입법을 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것이다.

22) 정사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224면.

23) 정극원, 앞의 논문, 406면. 입법방침규정설은 다시 소극적 프로그램설과 적극적 프로그램설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설은 입법권의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적극적 프로그램설은 생존권규정은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김철수, 헌법상의 환경권, 공법이론의 현대적 조명, 형설출판사, 1997, 27면.

24) 천병대·김명길, 앞의 책, 95면.

25) 정극원, 앞의 논문, 408면.

26) 정사인, 앞의 논문, 224면.

27) 최봉석, 앞의 책, 66면.

## 2) 판례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sup>28)</sup> 그러나 위의 환경권의 범위와 관련해 다른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 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sup>29)</sup>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sup>30)</sup>고 판시하여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3. 주관적 권리성과의 관계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성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려는 견

28) 부산고등법원 1995.5.18 선고, 95카합5 판결참조. 이에 대해 이는 마치 헌법 제35조에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나오는 것처럼 판시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29) 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참조.

30)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참조.



해는 헌법상 환경권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나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원고적격의 근거가 없이도 헌법상 방어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사용하여 환경분쟁을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환경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부에게 맡김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sup>31)</sup>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나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경우나 최소한의 환경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인용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sup>32)</sup>

#### IV. 환경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

#####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다. 그 손해는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유형적·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행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환경소송에서 과실입증의 곤란성으로 인한 입증책임에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무과실책임으로 전환, 위법성과 판단에서 수인한도론의 고려, 그리고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증명의 곤란성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개연성이론의 채택 등 환경소송에서의 특수성이 있다.<sup>33)</sup>

31) 조홍식, “환경법 소묘·환경법의 원리-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2호, 2000, 349면.

32) 김종보·김배원, 앞의 논문, 47면. 만일 직접적으로 환경침해에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신체·재산 등 정형적인 자유권의 침해일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권의 특수성과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순수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는 것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종보·김배원, 앞의 논문, 43면.

33) 김백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2005, 139면.

## 2.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수단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sup>34)</sup> 먼저, 공법관계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sup>35)</sup> 전형적인 공법적인 관계이다.

환경권이 가지는 방어권의 성격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면 개인은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주관적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즉 국가에 의한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바로 이러한 방어권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 환경침해·환경파괴행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행정청의 작위·부작위 직·간접으로 매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해 청원권의 행사나 국가배상, 행정소송의 제기<sup>36)</sup>, 헌법소원의 제기 등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 1)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환경권에 관한 침해는 어떻게 침해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그 권리구제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다.<sup>38)</sup> 환경침해는 일반적으로 사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34)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후구제는 완전한 구제를 실현하는 것이 거의 용이하지 않다. 즉, 권리는 한번 침해되면 전보 받기까지 소요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침해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환경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사언, 앞의 논문, 226면, 주10)

35) 환경오염의 유발을 가져올 행정청의 조치나 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과정에서 그러한 조치나 처분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하는 당사자에게 권리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환경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행정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보장하는 절차법제의 정비가 요청되는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해룡,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권리구제, 계명법학 제5집, 2001, 119면 이하 참조.

36) 행정소송으로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의 개입을 청구하고 행정관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 먼저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이 현실적으로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부작위한 경우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7) 설계경, “환경침해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498면.

38) 환경보존에 관한 법의 대부분은 행정법규이며, 환경보존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작용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행정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규제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갖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환경권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져 오히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가 너무 약화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 환경행정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原田尚彦, 環境法, 弘文堂, 1994, 245頁.

이나 행정관청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침해도 발생한다.

환경행정소송은 환경상 이익의 보호나 침해된 환경 이익의 구제를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을 총칭한다.<sup>39)</sup> 그리고 행정주체가 환경규제에 관한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또는 행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적법성과 관련된 분쟁해결이라는 형식으로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환경소송에서는 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등 주민 일반에게 공통되는 집단적 이익 내지는 생활적 이익의 보호가 문제된다.<sup>40)</sup> 오늘날 환경행정소송의 특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환경오염에 대해 규제행위의 해태와 같은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행정침해와 같은 행정의 적극적 작위로 인한 권익침해 못지않게 오히려 규제권한의不行사·해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위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과 같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환경상 권익침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도 그 허가의 상대방 보다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익 구제<sup>41)</sup>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42)</sup>

이에 사인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재판 전의 권리구제, 민사재판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는 행정관청의 침해형태에 따라 쟁송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는 첫째, 위법한 인허가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해준 행정관청이 환경보전과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단속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행정관청이 그 법적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해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39)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11, 1019면.

40)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929면.

41) 환경이라는 매개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특징의 하나로서는 행정청의 환경행정활동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환경오염이나 환경침해를 이유로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환경오염시설을 위법·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제3자인 인근주민의 원고적 격문제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이 중요하다. 환경행정쟁송에서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제3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윤, 행정법이론, 성대출판부, 2000, 287면.

42) 구형근,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권, 한국법학회, 2007, 42면.

43) 정사연, 앞의 논문, 228면. 그러나 여기서 행정관청의 규제·단속이 재량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행

## 2)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원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44)</sup> 이것은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권은 헌법에 의해 법률제정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실시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나 입법자는 환경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정된 환경 관련법에 환경권보호에 있어서 사실상 불충분한 보호로 판단이 되면 당해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거나 법률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와 헌법해석상 헌법적 입법의무가 있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sup>45)</sup>

위와 같은 권리구제수단의 행사로도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난 후에 그것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이 하지 않은 문제로 남는다.<sup>46)</sup>

## V. 맺으며

먼저 환경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환경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볼 때 무작정 확장적인 범위까지의 환경권은 타 기본권에 침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 우리 법영역에서 환경권의 범위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정법상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때문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환경권의 실현이 제한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사언, 앞의 논문, 228면.

44) 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45)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89헌마2 결정.

46) 정사언, 앞의 논문, 234면.

그리고 환경권은 그 성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생존권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 침해가 있으면 그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인 소극적·방어권적인 성질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먼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질은 자유권적인 성질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별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소구권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의 적극적인 청구권적 성질은 생존권적인 성질로서 그 성질상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나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권질서와 더불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념으로 하여 복지국가의 실현을 표방하고 있기에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최저한도의 보장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47)</sup> 이에 과연 최저한도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 문제 될 뿐일 것이다.<sup>48)</sup> 즉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판단사항일 뿐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sup>49)</sup>

그리고 판결을 통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라고 볼 수 있었다.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권리주체, 법익, 청구방법 등의 법적인 구체성이 명확히 되어야만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권을 행사하기 위해 환경권의 실현수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본다.<sup>50)</sup> 그리고 환경권은 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추상적 권리로서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되고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환경을 헌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헌법적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sup>51)</sup> 이는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여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현행 헌법과 환경관련 법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

47) 정사언, 앞의 논문, 226면.

48) 방어적인 측면에서 환경권은 보통 개별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상세한 규정들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측면의 환경권에 있어서 그 효력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측면의 환경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환경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권 효력의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다른 가치들도 함께 고려하는 조화의 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현호,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150면.

49) 정사언, 앞의 논문, 226면.

50)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41면.

51) 정극원, 앞의 논문, 408면. 여기서 추상적 권리의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 또는 입법형성에 의하여 추상성이 제거되지만 하면 구체적인 실현을 이루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격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강령의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극원, 앞의 논문, 408면.

며, 대법원이 환경문제에 있어 사법소극주의로 후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sup>52)</sup> 그러므로 우리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아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개인이 환경침해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에 확보를 위해 법원의 기능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원고적격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는 환경권의 규범화를 이룰 것이다.

원고적격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sup>53)</sup>을 어느 범위까지 미치게 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확대는 소송에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처분 등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닐지라도 명예·신용회복, 헌법상 기본권 등 일반적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54)</sup> 또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 표현함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sup>55)</sup>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는 과거에 묵시되었던 일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까지 발생되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의 원고적격의 확대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환경쟁송에 있어서 문제로 입증책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행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입증의 문제는 증거제일주의를 표현하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특성상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즉, 피해의 원인에서부터 가해의 행위에 이르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가해자의 비협조, 전문적인 조사, 의학적 관계, 비용의 지출 등에 있

52) 이한태, “환경관련 조항의 헌법상 위상에 대한 재조명”, 충남대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 23면.

53)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12조는 ‘취소소송은 행정행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며,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대신 ‘정당한 이익’으로 규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결국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규정은 원고적격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부정당한 이익과 사실상 이익을 배제하는데 그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는 원고적격을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황에 맞추어 판례 및 학설에 의해 구체화 되도록 하자는 견해이다. 박정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I, 법원행정처, 2007, 869-870면.

55)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설명자료”, 행정소송법 개정자료 I, 법원행정처, 2007, 77-78면.

어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자기 인과관계를 입증함이 원칙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사실과 관계된 개연성만으로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증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sup>56)</sup>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환경 행정영역에 있어 재량 통제와 권리 확대를 모색하여 행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56) 정사언, 앞의 논문, 237면.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김철수, 헌법상의 환경권, 공법이론의 현대적 조명, 형설출판사, 1997.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11.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4판, 박영사, 2010.  
박윤훈,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이광윤, 행정법이론, 성대출판부, 2000.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原田尚彦, 環境法, 弘文堂, 1994, 245頁.

### 2. 논문

- 고무현, 환경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4.  
구형근,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권, 한국법학회, 2007.  
김백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2005.  
김종보·김배원,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1호, 2012.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



- 환경법학회, 2006.
- 김해룡,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권리구제, 계명법학 제5집, 2001.
-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설명자료, 행정소송법 개정자료 I, 법원행정처, 2007.
- 박정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I, 법원행정처, 2007.
- 설계경, 환경침해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 이한태, 환경관련 조항의 헌법상 위상에 대한 재조명, 충남대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
- 정극원, 헌법처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 정사언, 환경오염의 법적규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고향논집 제17호, 1996.
- 조홍식, 환경법 소묘·환경법의 원리-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2호, 2000.
-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연구 제27권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5.
- 홍성방, 한국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4권, 1990.